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은 정상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거치는 절차와 기간을 따라간다

누군가 내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사기 피해금이라고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지급정지 범위는 입금액이 아니라 계좌 잔액 전부다.

계좌 이용을 재개하려면 명의인이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 사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는 채권소멸 공고기간 2개월과 환급금액 결정기한 14일이 적혀 있다.

연구소는 신고 접수와 지급정지 해제의 요건·처리기간 차이를 분석한다. 피해 신고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급정지 해제는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 심사를 거친다. 이 차이는 정상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8월 14일	2026년 8월 14일	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내 잘못이 아닌데 계좌가 멈추면 무엇을 해야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엇을 알아냈나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은 이의제기 신청서와 정상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 범위는 입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소명자료를 갖춘 이의제기의 심사 결과를 5영업일 안에 알리도록 정했고, 은행권부터 시행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계좌가 멈추면 오늘 세 가지를 한다. 어느 금융회사가 정지를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낸다. 낸 날짜와 접수 번호를 적어 둔다.

한눈에

이의제기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수수료는 없다. 소명자료를 갖춰 내면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린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영업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이다. **3영업일과 3일은 다르다.**
- 기간은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겼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 지급정지 건수와 피해액은 언론이 보도한 값이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혔다.
- 이의제기가 몇 건 들어와 몇 건이 받아들여졌는지는 공개된 통계가 없다. 이 보고서는 인용 비율을 쓰지 않았다.
- 일부만 정지를 푸는 요건에 나오는 소액의 금액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금액을 적지 않았다.
- 어려운 말은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2장	그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5
3장	우리가 찾아낸 것	7
4장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12
5장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15
6장	읽는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17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1

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계좌가 멈추면 무엇이 얼마 동안 멈추는가.

2개월 이의제기가 없을 때 채권이 소멸하기까지 2026년 8월 · IBK자산운용	14일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액을 정하는 기한 2026년 8월 · 한국씨티은행	90일 지급정지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기간 2026년 8월 · 우리은행
--	--	---

계좌 하나가 멈추면 그 계좌에 든 돈 전부가 멈춘다. 들어온 돈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은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고 적어 두었다.¹

정지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씨티은행 안내 화면에는 채권소멸에 2개월, 환급금액 결정에 14일이 걸린다고 적혀 있다.² 우리은행 공시 화면에는 지급정지가 정지일부터 90일 동안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³

이 정지가 한 해에 몇 건이나 걸리는지부터 본다.

한 달에 1만 건이 넘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섯 개 은행의 지급정지 계좌가 14만 9,176건이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을 집계한 값이다.⁴ 한 달로 나누면 1만 2,000건이 넘는다.

계좌가 멈추면 들어온 돈만 멈추지 않는다. 그 계좌에 든 돈 전부가 멈춘다.

지급정지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될 때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이체와
출금이 함께 막힌다.

속도도 빨라졌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7만 2,000여 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3만 2,683건의 두 배가 넘는다.⁵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9,353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1만 4,461건보다 5,108건 적다.⁶

사기 신고는 줄었는데 멈춘 계좌는 늘었다. 두 숫자가 반대로 움직였다.

돌려받는 돈은 피해금의 5분의 1 남짓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7,731억 원이다. 환급액은 3,986억 원으로 22.4%다.⁷ 피해금 100만 원 가운데 22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사이버 사기 전체로 넓히면 규모가 더 커진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도 있다. 2024년 사이버 사기 발생은 20만 8,920건이다.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이다. 검거율은 53.8%로 2021년 72.2%보다 낮다.⁸

멈춘 계좌가 모두 사기 계좌는 아니다

사기 조직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한다. 그러면 그 계좌가 멈춘다. 이 수법을 통장묶기라고 부른다.⁹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받거나 월급을 받은 계좌도 대상이 된다. 2025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8,938건이다. 그 가운데 개인 사이 거래가 5,848건으로 65.4%다.¹⁰ 다만 이 가운데 몇 건이 계좌 정지로 이어졌는지를 담은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통장묶기로 멈춘 계좌가 몇 건인지도 따로 집계한 자료가 없다. 지급정지 통계는 사유를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정도로만 나눈다. 이 보고서가 건수를 적지 않는 이유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 알림을 켜 둔다. 계좌가 멈추면 알림과 문자로 먼저 알 수 있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알림 설정에서 입출금 알림을 켜둔다.

2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와 물건값을 받는 계좌를 나눠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에서 입출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든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만으로 정지를 막지 못한다. 정지 위험을 줄이는 일과 정지를 막는 일은 다르다.

2장

그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누가 무엇을 하고 며칠이 걸리는지를 순서대로 적는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의인은 서류를 제출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소멸절차

멈춘 계좌에 든 돈에 대해 명의인이 가진 권리를 없애는 절차다.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3영업일

전화 요청 뒤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는
기한

2026년 8월 · 카카오페이증권

30일

피해자가 채권소멸 공고를 요청하는
기간

2026년 8월 · 우리은행

1만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잔액 기준

2026년 8월 · 우리은행

피해자는 신고 창구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창구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이다.¹¹

전화만으로는 정지가 유지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증권 안내에는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¹² 신청서와 함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낸다.

금융회사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를 정지한다. 정지하면 명의인과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린다. 명의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누리집에 공시한다.¹³

그다음은 피해자 쪽 절차다. 피해자는 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¹⁴ 금융감독원이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권리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한다.¹⁵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멈춘 계좌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¹⁶ 피해자가 여럿이면 멈춘 잔액 범위 안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¹⁷

<표 1> 계좌가 멈춘 날부터 다시 쓰기까지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하고 며칠이 걸리는가

단계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람	기간	근거 자료
1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피해자	즉시	금융사기 신고 창구 안내
2	피해구제 신청서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낸다	피해자	3영업일 안	카카오페이증권
3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	금융회사	확인한 뒤 곧바로	IBK자산운용
4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알린다	금융회사	지체 없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5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피해자	통지 뒤 30일 안	우리은행
6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낸다	명의인	정지된 날부터 공고 2개월 전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심사 결과를 알린다	금융회사	5영업일	금융감독원
8	이의제기가 없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환급한다	금융감독원	공고 뒤 2개월, 환급 14일	IBK자산운용

주: 1) 3단계의 '계좌 전체'와 7단계의 '5영업일'은 발표 기관과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값이다.
2) 7단계에서 자료 보안을 요청하면 5영업일, 다시 요청하면 3영업일이 붙는다는 보도가 있다.¹⁸ 발표 원문에는 늘어나는 일수가 적혀 있지 않다.
자료: 금융감독원 발표(2026년 5월 4일), 한국씨티은행·IBK자산운용·카카오페이증권·우리은행 안내 화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을 정리.

표를 순서대로 읽으면 어느 단계에 시간이 드는지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며칠 안에 끝난다. 5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두 달을 넘는다.

명의인이 직접 나서는 단계는 6단계 하나다. 그 단계에서 서류를 갖춰 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계좌가 멈추면 어느 금융회사가 정지를 요청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내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 회사와 정지 일시를 묻는다.

2 정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둔다. 이 날짜가 뒤 절차의 기준이 된다.

확인하는 곳 · 문자와 우편 통지, 은행 앱의 알림함을 함께 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부탁할 일이 아니다. 정지를 푸는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

3장

우리가 찾아낸 것

지급정지 요청과 해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가 서로 다르다.

계좌 명의인은 정상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중에는 계좌 잔액 전부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

이의제기

지급정지 계좌의 명의인이 정상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급정지 종료를 요청하는 절차다.

계좌 전체

지급정지가 걸리는 범위
2026년 8월 · IBK자산운용

2종

이의제기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수
시행령 별지 서식 · 하나은행 게시

5영업일

소명자료를 갖춘 이의제기의 심사 기한
2026년 5월 ·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요청과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요건이 다르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¹⁹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피해자가 할 일은 전화와 서류 한 벌이다. 전화로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낸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함께 낸다.

명의인은 정상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의 거래가 사기와 관련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의제기는 계좌가 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의 공고기간인 2개월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²⁰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이 명의인의 소명자료를 대신 작성하지 않는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끝낸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소멸절차가 계속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이에는 제출 요건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다.

멈추는 범위는 입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은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고 적어 두었다. 들어온 금액이 얼마든 계좌에 든 돈이 함께 멈춘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면 월급도 함께 멈춘다.

토스뱅크 안내에는 정지가 걸리면 약 2개월 동안 계좌를 쓰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최대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²¹

정지 한 번으로 두 달 동안 결제가 막히고 3년 동안 비대면 통장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다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은 시행령에 별지로 정해져 있다. 하나은행이 게시한 서식을 보면 적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다. 멈춘 계좌의 금융회사와 개설 점포,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명의인도 적는다.²²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 한 부와 본인 확인 서류 사본 한 부다. 수수료는 없다. 신청 기록은 낸 날부터 5년 동안 남는다.

깊이 보기 · 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는 무엇인가

서식은 자료 한 부라고만 적혀 있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이 부분을 사유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의제기 사유마다 가장 적은 공통 자료를 정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만 더 요청한다.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인지,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낼 서류가 갈린다.

이 구분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회사마다 달랐다. 명의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영업점에 가야 했다. 표 2가 사유별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가

이의제기 사유별로 정리한 가장 적은 소명자료

이의제기 사유	내야 하는 서류	어디서 받는 서류인가	달라진 점
물품 거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가운데 한 가지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내역	세무서와 홈택스 거래 상대 본인 휴대전화	회사마다 달랐던 요구 서류를 세 가지로 정했다
급여 등 일한 대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가운데 한 가지 급여 입금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일하는 회사 은행 앱	두 가지만 갖추면 접수한다
공통	이의제기 신청서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한 부 본인 확인 서류 사본 한 부	금융회사 영업점과 누리집 본인	서식과 첨부 두 가지는 이전부터 같다

주: 1) 공통 항목은 시행령 별지 서식에서 확인한 값이다.

2) 사유별 항목은 금융감독원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른 값이다. 발표 원문에는 사유별로 최소한의 공통 자료만 요구한다는 원칙이 적혀 있다.²³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하나은행 게시분), 금융감독원 발표(2026년 5월 4일), 언론 보도를 정리.

정지에는 기간이 있었고 해제에는 없었다

법은 절차마다 날짜를 정해 두었다. 공고 2개월, 환급 14일, 피해자 신청 30일이 그렇다. 명의인이 낸 이의제기를 며칠 안에 심사해야 하는지는 정해 둔 값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4일 이 기한을 5영업일로 정해 발표했다.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낸 경우가 기준이다.²⁴ 보안을 요청하면 5영업일, 다시 요청하면 3영업일이 붙는다는 보도가 있다.²⁵

같은 발표에는 요건을 갖춘 소액 입금 건을 일부만 정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요건은 세 가지다. 입금액이 적어야 한다. 과거에 정지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 금액을 뺀 거래가 생계와 이어져야 한다.²⁶ 다만 적다고 보는 금액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안내는 피해자 쪽에만 자세하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도 명의인이 그것을 읽을 곳이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아홉 곳의 안내 화면을 같은 항목으로 맞춰 봤다.

<표 3>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2026년 8월 14일 각 회사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

금융회사	화면의 성격	화면에 적힌 기간	필요 서류	이의제기 접수 창구
우리은행	공시 목록	90일, 잔액 1만 원 기준	없음	없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시 목록 두 가지	없음	없음	없음
다올저축은행	공시 목록	없음	없음	콜센터 번호만
NH농협은행	보안센터 안내	없음	없음	고객센터 번호만
한국씨티은행	절차도	2개월, 14일	없음	없음
IBK자산운용	절차도	2개월, 14일	없음	없음
카카오페이증권	절차도	3영업일, 2개월, 14일	서식 세 가지	없음
하나은행	신청 서식	없음	첨부 두 가지	없음
토스뱅크	안내 글	약 2개월, 최대 3년	없음	없음

주: 1) 공시 목록은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계좌의 정지 사실을 알리는 화면이다. 명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담고 있지 않다.

2) 다올저축은행 화면에는 확인 시점 기준 계좌 99건이 올라와 있다.

자료: 각 금융회사 누리집 안내 화면(2026년 8월 14일 확인)을 같은 항목으로 정리.

아홉 곳 가운데 필요 서류를 적어 둔 곳은 두 곳이다. 이의제기를 어디에 내는지 적어 둔 곳은 없다. 공시 목록 네 곳은 계좌번호와 정지 금액을 줄지어 보여 준다. 그 화면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 금융회사가 정지를 미루는 사이 피해금이 빠져나가면 그 결과는 금융회사가 감당한다. 반대로 넓게 정지해 두면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명의인이 두 달 동안 입는 손해에는 금융회사가 지는 책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쪽에만 책임이 있으면 절차는 그 책임을 피하는 쪽으로 정해진다.

2024년 1월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방향을 시도한 적이 있다. 본인 확인과 거래 분석을 묶어 1시간 안에 정지를 푸는 절차를 만들었다.²⁷ 규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정해서 이뤄진 일이다.

2026년 5월 이 절차에 처음으로 공통 기한이 생겼다. 그 전까지는 명의인이 낸 이의제기를 며칠 안에 심사해야 하는지 정한 값이 없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을 미리 내려받아 어떤 항목을 적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누리집의 고객 안내 자료실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찾는다.

2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다면 대화 내역과 거래 서류를 함께 남긴다.

확인하는 곳 · 거래에 쓴 앱의 대화 내역을 내려받아 저장한다.

3 이의제기에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확인하는 곳 · 시행령 별지 서식의 수수료 칸에 없음으로 적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제안에 응할 일이 아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내면 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누가 정지를 정하고, 명의인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일본은 해마다 계좌 수와 금액과 지급률을 공개한다. 우리는 이의제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계좌동결명령

영국에서 법원이 계좌의 돈을 묶으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고 기간도 법원이 적는다.

59,644계좌

일본이 2024년도에 소멸 공고를 낸 계좌

일본 예금보험기구

87.7 %

일본의 2024년도 피해회복 분배금 지급률

일본 예금보험기구

85,000파운드

영국의 사기 지급 배상 상한
2024년 10월 이후 · 영국 PSR

일본은 우리와 절차가 닮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일본도 금융기관이 정지를 정한다. 범죄에 쓰인 예금계좌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약관에 따라 거래를 멈춘다. 예금보험기구가 공고하고 60일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 권리가 사라진다.²⁸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명의인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면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가 멈춘다. 둘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나중에 청구할 길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과 계좌를 쓴 내역, 주된 입금 원인을 설명하면 된다. 범죄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사라진 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²⁹

규모도 해마다 공개한다. 2024년도에 일본은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25회 냈다. 계좌 5만 9,644건, 채권액 107억 7,807만 엔이다. 분배금 지급 절차 개시 공고도 25회로 계좌 2만 8,771건이다. 지급 절차를 끝낸 공고는 28회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49억 1,139만 엔이다. 지급률은 87.7%다.³⁰

잔액이 적은 계좌를 빼는 기준도 있다. 잔액 1,000엔 미만 계좌 2만 8,045건은 분배 대상에서 빠졌다.³¹

영국은 배상을 먼저 하고 계좌 동결은 법원이 정한다

영국은 순서가 다르다. 2024년 10월 7일 이후 지급분부터 돈을 보낸 쪽 지급기관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상한은 8만 5,000파운드다. 이 금액 안에 전체 청구의 99% 이상이 들어간다. 청구 기한은 마지막 사기 지급일부터 13개월이다.³²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배상하고, 자료가 더 필요하면 35영업일까지 늘린다. 취약 소비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100파운드까지 자기부담금을 매길 수 있다. 돈을 받은 쪽 지급기관은 배상액의 50%를 낸다.³³

계좌를 묶는 일은 따로 정한다. 사기가 의심되면 지급을 최장 4영업일까지 미룰 수 있다. 미룬 사실과 이유, 지급인이 해야 할 일을 늦어도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알려야 한다. 늦어져서 생긴 수수료와 이자는 지급기관이 낸다.³⁴

계좌 자체를 묶으려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한다. 명령 기간은 명령한 날부터 2년을 넘을 수 없다. 자금세탁 의심을 신고한 뒤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통지 기간 7영업일과 그 뒤 유예 기간 31일이고, 더 늘리려면 법원이 정한다.³⁵

미국은 계좌를 묶는 일반 규정이 없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때의 절차만 정해 두었다. 금융기관은 그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한 번의 요청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게 적는다. 기간이 끝나면 수사기관이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할지 달을지는 금융기관이 자기 기준에 따라 정한다.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³⁶

호주는 사업자에게 막을 의무를 지웠다

호주는 계좌를 묶는 절차가 아니라 사기를 막는 의무를 정했다. 2023년 사기 신고 60만 1,000건, 피해 27억 4,000만 호주달러가 근거다. 은행과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에 사기를 막고 찾아내고 끊을 의무를 지운다. 은행에는 24시간 신고 창구와 실시간 거래 알림 의무가 들어 있다.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호주달러 과징금을 물린다.³⁷

<표 4> 돈을 받은 쪽 계좌를 나라마다 어떻게 다루는가

누가 정하고 얼마 동안 묶이며 명의인은 무엇을 하는가

나라	누가 정하는가	묶이는 범위	정해진 기간	명의인이 하는 일	피해자 배상
한국	금융회사	계좌 전체	공고 2개월 환급 14일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님을 밝힌다	멈춘 잔액 안에서 나눈다

나라	누가 정하는가	묶이는 범위	정해진 기간	명의인이 하는 일	피해자 배상
일본	금융기관	계좌	공고 60일 이상 신청 30일 이상	권리행사를 신고하거나 나중에 지급을 청구한다	사라진 예금에서 나눈다
영국	법원	명령이 정한 계좌	동결 최장 2년 지급 지연 최장 4영업일	확인한 자료에 소명 절차가 없다	보낸 쪽이 배상하고 받은 쪽이 절반을 낸다
미국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정한다	수사기관 요청 한 번에 6개월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기준에 따른다	일반 규정이 없다
호주	정한 규정이 없다	정한 규정이 없다	정한 규정이 없다	정한 규정이 없다	분쟁조정기구가 사업자의 책임 비율을 따져 정한다

주: 1) 호주는 계좌를 묶는 절차 대신 사업자에게 사기를 막을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2) 영국의 배상과 계좌 동결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정한다. 같은 절차가 아니다.

자료: 일본 금융청·예금보험기구·전국은행협회, 영국 지급결제감독청·금융행위감독청·범죄수익법, 미국 FinCEN·통화감독청, 호주 재무부 자료를 정리.

표를 나라별로 견주면 우리 제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정지를 정하는 주체는 일본과 같고, 묶이는 범위는 계좌 전체로 더 넓다. 명의인이 스스로 밝혀야 하는 점도 일본과 같다.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일본은 신고만 해도 절차가 멈추고 뒤늦은 청구도 받는다. 그리고 해마다 계좌 수와 금액과 지급률을 공개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해외 송금으로 돈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나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한다.

확인하는 곳 · 송금을 받는 금융회사에 사기 신고가 들어올 때의 절차를 묻는다.

2 영국에서 지급이 미뤄졌다면 그 이유를 다음 영업일 안에 받는다.

확인하는 곳 · 지급을 처리한 기관의 통지 문서를 보관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다른 나라 제도를 알아 두는 것으로 우리 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내 절차는 표 1을 따른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설계를 본다.

정지에는 오래전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해제에는 이제야 기한이 생겼다.

1,000엔 일본이 분배 대상에서 빼는 잔액 기준 2024년도 · 일본 예금보험기구	최대 3년 비대면 통장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 기간 2026년 8월 · 토스뱅크	6개월 미국 수사기관이 한 번에 요청하는 계좌 유지 기간 미국 FinCEN
---	---	--

연구소는 다섯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모두 절차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첫째, 멈추는 범위를 입금액부터 잡는다

지금은 계좌 전체가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만 푸는 방식이다. 순서를 뒤집을 수 있다. 들어온 금액만 먼저 묶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도입한 일부 정지가 이 방향이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요건을 넓히면 월급과 생활비가 함께 멈추는 일이 줄어든다.

둘째, 소액의 금액 기준을 공개한다

일부만 정지하는 요건에는 입금액이 적을 것이 들어 있다. 얼마부터 적다고 보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기준을 모르면 명의인은 자기가 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일본은 1,000엔 미만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밝혀 두었다. 우리도 잔액 1만 원이라는 기준은 공시 화면에 적혀 있다.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된다.

셋째, 이의제기 결과를 숫자로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몇 건 들어왔고 몇 건이 받아들여졌으며 평균 며칠이 걸렸는지를 담은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한을 5영업일로 정했어도 그 기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밖에서는 없다.

일본은 공고 회수와 계좌 수, 금액과 지급률을 해마다 낸다. 공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안내 화면에 명의인이 할 일을 적는다

표 3에서 본 것처럼 아홉 곳 가운데 필요 서류를 적어 둔 곳은 두 곳이다. 접수 창구를 적어 둔 곳은 없다. 공시 목록만 두고 절차를 적지 않으면 명의인은 콜센터에 물어야 한다.

적어야 할 것은 네 가지다. 무엇을 내는지, 어디에 내는지, 며칠 안에 답을 받는지, 답이 늦으면 어디에 묻는지다.

다섯째, 정지 이력이 남기는 제한을 정리한다

정지가 풀려도 이력이 남는다. 비대면으로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최대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남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다.

정지가 잘못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이력을 지우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절차를 바로잡는 일과 기록을 바로잡는 일은 다른 일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5영업일 기한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넓어지는 시점이다. 발표에는 은행권에서 먼저 하고 다른 업권으로 넓힌다는 계획만 있다. 언제 넓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둘째, 소액의 금액 기준이 공개되는지다. 셋째, 이의제기 처리 통계가 나오는지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은 금융회사와 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이 의심 정보를 함께 보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그 정보를 모으는 기관이다.³⁸ 정보를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지도 빨라진다. 푸는 쪽 절차도 함께 빨라지는지를 봐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거래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 이의제기 절차가 적혀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누리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지급정지로 찾는다.

2 적혀 있지 않으면 콜센터에 서류와 접수 창구를 묻고 답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 일시와 담당 부서를 함께 적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의제기를 낼 일은 없다.

서식과 서류만 알아 두면 된다.

읽는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일

계좌가 멈춘 날과 그 뒤 며칠에 무엇을 하는가.

이의제기에는 수수료가 없다.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낸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할 때 내는 서류가 아니다.

1332

금융감독원 상담과 신고
2026년 8월 확인

1566-1188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2026년 8월 확인

112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신고
2026년 8월 확인

계좌가 멈춘 날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어느 금융회사가 정지를 요청했는지와 정지 일시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내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한다.
- 2 멈춘 금액과 계좌번호를 적어 둔다. 이의제기 신청서에 그대로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과 정지 통지 문자를 본다.
- 3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옮긴다. 통신비와 관리비가 먼저 밀린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자동이체 목록에서 출금 계좌를 바꾼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정지된 계좌를 해지할 일이 아니다. 해지해도 절차는 그대로 이어진다.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할 것

이의제기 접수 전에 준비할 것

- 1**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아 이름과 계좌 정보를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금융회사 누리집 자료실이나 영업점에서 서식을 받는다.
- 2**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면 세 가지를 모은다. 사업자등록증, 거래 서류 한 가지, 상대와 나눈 대화 내역이다.
확인하는 곳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거래 앱에서 대화 내역을 내려받는다.
- 3**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면 두 가지를 모은다.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급여 입금내역이다.
확인하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은행 앱 거래내역에서 받는다.
- 4** 본인 확인 서류 사본 한 부를 함께 붙인다.
확인하는 곳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접수를 미룰 일이 아니다. 모자란 자료는 보완 요청을 받아 채우면 된다.

넌 다음

넌 뒤에 할 수 있는 것

- 1** 넌 날짜와 접수 번호, 담당 창구를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접수증이나 앱의 접수 완료 화면을 저장한다.
- 2** 5영업일이 지나도 결과를 못 받으면 접수 번호를 들고 다시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접수한 금융회사. 답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한다.
- 3** 결과를 받으면 정지가 전부 풀렸는지 일부만 풀렸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에서 이체와 출금이 되는지 소액으로 확인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낼 일이 아니다. 접수 번호 하나로 진행 상황을 물으면 된다.

돈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정지는 돈을 받은 뒤에 걸린다. 받기 전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내역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서류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소명자료가 된다.

개인 사이 거래에서는 대화 내역이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앱을 지우면 함께 사라진다. 거래가 끝나도 한동안 남겨 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거래 앱의 대화 내역을 지우지 않고 보관 기간을 정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에 쓴 앱의 설정에서 대화 보관 기간을 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모든 거래 기록을 종이로 뽑아 둘 일은 아니다. 앱에 남아 있으면 된다.

APPENDIX A

부록 가·용어 풀이

지급정지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될 때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사기이용계좌

사기에 쓰인 계좌를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 보고서는 사기에 쓰인 계좌로 적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금융회사에 내는 신청이다.

채권소멸절차

멈춘 계좌의 돈에 대해 명의인이 가진 권리를 없애는 절차다.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이의제기

명의인이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소명자료

이의제기를 할 때 그 돈이 정상 거래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내는 서류다.

일부 지급정지

계좌 전체가 아니라 들어온 금액만 묶어 두는 방식이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이다. 주말이 끼면 5영업일은 달력으로 일주일을 넘는다.

통장묶기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해 그 계좌를 멈추게 하는 수법이다.

계좌동결명령

영국에서 법원이 계좌의 돈을 묶으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APPENDIX B

부록 나·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금융감독원, 「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됐지?」 보도자료, 2026년 5월 4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546>)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문. U-LEX 법률우주 전재본.
ulex.co.kr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11356-011359-%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ED%94%BC%ED%95%B4%EA%B8%88>)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3. (1차) 한국씨티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citibank.co.kr
(<https://www.citibank.co.kr/kr/CusFconCnts0300.act>)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4. (1차) IBK자산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ibkasset.com
(<https://www.ibkasset.com/util-menu/refund-guide>)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5. (1차) 우리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공시」.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CCS0088>)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6. (1차) 카카오페이증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 안내」. kakaopaysec.com
(<https://kakaopaysec.com/portal/cstmnotice-tele+proc/dynamicPage.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7. (1차) 하나은행 게시, 「이의제기 신청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image.kebhana.com
(https://image.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7/customer0701/customer070106/_icsFiles/afieldfile/2024/08/21/5-08-0246.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8. (1차) 토스뱅크, 「계좌 지급정지」 안내. tossbank.com
(<https://www.tossbank.com/articles/account-freeze>)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9. (1차) 다올저축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관련 공시」. daolsb.com
(<https://www.daolsb.com/fcplInfo/fcplInfoNotice/fnnccFraud01.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0. (1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standardchartered.co.kr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np/kr/cms/cm/cc/TelecommunicationNotice.jsp>)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1. (1차) NH농협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안내」. banking.nonghyup.com
(<https://banking.nonghyup.com/servlet/content/ip/ec/ipec0535c.shtml>)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2. (1차) 금융사기예방 관련 기관 안내, 「금융사기 신고·피해구제 기관 안내」. kfcpf.or.kr
(<https://www.kfcpf.or.kr/front/protect/reportingAgency.do>)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3. (1차) 일본 예금보험기구, 「2024년도 공고 실적」, 2025년 5월 9일. dic.go.jp
(<https://www.dic.go.jp/yokinsha/content/250509koukoku.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4. (1차) 일본 금융청, 「振り込め詐欺救済法における手続の流れ」. fsa.go.jp
(https://www.fsa.go.jp/policy/kyuusai/kyuusai_pdf/01.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5. (1차) 일본 금융청, 「振り込め詐欺救済法 Q&A」. fsa.go.jp
(https://www.fsa.go.jp/policy/kyuusai/kyuusai_pdf/06.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6. (1차) 일본 전국은행협회, 「振り込め詐欺救済法とは」. zenginkyo.or.jp
(<https://www.zenginkyo.or.jp/hanzai/rescue/>)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7. (1차) 영국 Payment Systems Regulator, 「APP fraud reimbursement protections」.
psr.org.uk (<https://www.psr.org.uk/information-for-consumers/app-fraud-reimbursement-protections/>)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8. (1차) 영국 Payment Systems Regulator, 「PS25/5 APP scams reimbursement requirement」, 2025년 5월. psr.org.uk (<https://www.psr.org.uk/media/rhelv4op/ps25-5-app-scams-reimbursement-consolidated-policy-statement-may-2025.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19. (1차)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G24/6 Guidance for firms」. fca.org.uk
(<https://www.fca.org.uk/publication/finalised-guidance/fg24-6.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0. (1차) 영국 legislation.gov.uk, 「Proceeds of Crime Act 2002, s.303Z3」.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29/section/303Z3>)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1. (1차) 영국 legislation.gov.uk, 「Proceeds of Crime Act 2002, s.335」.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29/section/335>)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2. (1차) 미국 FinCEN, 「FIN-2007-G002 Requests by Law Enforcement to Maintain Accounts」. fincen.gov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Maintaining_Accounts_Guidance.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3. (1차) 미국 통화감독청, 「Bulletin 2007-37」. occ.gov (<https://www.occ.gov/news-issuances/bulletins/2007/bulletin-2007-37.html>)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4. (1차) 호주 재무부, 「Scams Prevention Framework」, 2025년 1월. treasury.gov.au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5-01/p2025-623966.pdf>)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5. (1차)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연계 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법률 제21320호(2026년 2월 3일 공포, 2026년 8월 4일 시행). nepla.ai
(<https://www.nepla.ai/law/%EC%A0%84%EA%B8%B0%ED%86%B5%EC%8B%A0%EA%B8%88%EC%9C%B5%EC%82%AC%EA%B8%B0-%ED%94%BC%ED%95%B4-%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26. (2차) The Daily Economy(2026년 5월), 뉴시스(2026년 4월 30일), 경북매일(2026년 5월 4일) · 이의제기 처리 기한과 일부지급정지 요건 교차 확인
 27. (2차) The Daily Economy(2026년 5월), 이즈보험 뉴스(2026년 5월 6일) · 이의제기 사유별 소명자료 목록 교차 확인
 28. (2차) SBS(2026년 6월 3일), 디지털타임스(2026년 6월 3일), 데일리안(2026년 6월 3일) · 다섯 개 은행 지급정지 건수 교차 확인
 29. (2차) 스포츠서울(2026년 8월 13일), 더데일리포스트(2026년 8월 13일) ·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환급률 교차 확인
 30. (2차) 헤럴드경제(2025년 9월 14일), 지이코노미 ·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와 검거율 교차 확인
 31. (2차) 뉴데일리경제(2024년 1월 22일), ZDNet코리아(2024년 1월 22일) · 통장류기 즉시 해제 교차 확인
 32. (2차) 뉴스핌(2026년 8월 4일), 법률신문 · 개정법 시행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교차 확인
 33. (2차) 연합뉴스·한국인터넷진흥원(2026년 6월 28일, 다음 전재) · 전자거래 분쟁 접수 건수 확인
- 자료 33건 가운데 1차 자료는 25건으로 75.8%다. 2차 자료의 숫자는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확인한 것만 썼다.

각주

1. IBK자산운용 안내. 입금내역 확인 뒤 계좌 전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2. 한국씨티은행 안내. 채권소멸절차 2개월과 환급금액 결정 14일이 단계별로 적혀 있다.
3. 우리은행 지급정지 공시 화면. 정지일부터 90일 기준이다.
4. SBS-디지털타임스-데일리안 보도. 다섯 개 은행 자료를 정리한 값이다.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5. SBS-디지털타임스 보도.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와 1년 전 같은 기간을 견준 값이다.
6. SBS-디지털타임스 보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 건수다.

7. 스포츠서울·데일리포스트 보도.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계이고, 환급률은 보도에 적힌 값이다.
8. 헤럴드경제·지이코노미 보도.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다.
9. 뉴데일리경제·ZDNet코리아 보도. 통장협박이라고도 부른다.
10. 연합뉴스·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보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기준이다.
11. 금융사기예방 관련 기관 안내의 신고 청구 목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도 함께 적혀 있다.
12. 카카오페이증권 안내. 3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조항. 통지와 공시 의무를 함께 정한다.
14. 우리은행 지급정지 공시 화면에 적힌 값이다.
15. IBK자산운용·카카오페이증권·한국씨티은행 안내에 같은 값이 적혀 있다.
16. 우리은행 지급정지 공시 화면. 잔액 1만 원 이하 기준이다.
17. 우리은행 지급정지 공시 화면. 피해자가 여럿일 때의 배분 방식이다.
18. The Daily Economy·뉴시스·경북매일 보도. 보완 5영업일, 재보완 3영업일이다. 발표 원문에는 일수가 없다.
1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조항. 의무로 정해 두었다.
2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의제기 조항과 지급정지 종료 조항이다.
21. 토스뱅크 안내. 약 2개월과 최대 3년이 적혀 있다.
22. 하나은행이 게시한 시행령 별지 서식. 첨부 두 가지, 수수료 없음, 보존 5년이다.
23. 금융감독원 발표 원문에는 사유별 최소 공통 자료 원칙이 적혀 있다. 서류 이름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
24. 금융감독원 발표, 2026년 5월 4일.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하고 다른 업권으로 넓힌다.
25. The Daily Economy·뉴시스·경북매일 보도. 2차 인용이다.
26. 금융감독원 발표와 이를 전한 언론 보도. 금액 기준은 어느 자료에도 없다.
27. 뉴데일리경제·ZDNet코리아 보도. 케이뱅크가 2024년 1월 22일 도입한 절차다.
28. 일본 금융청 절차 안내. 공고 뒤 60일 이상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29. 일본 금융청 질의응답 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30. 일본 예금보험기구, 2024년도 공고 실적. 2025년 5월 9일 발표다.
31. 일본 예금보험기구 2024년도 공고 실적에 적힌 값이다. 채권액은 1,276만 5,205엔이다.
32.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소비자 안내. 2024년 10월 7일 이후 지급분부터다.
33. 영국 지급결제감독청 정책문서 PS25/5. 받은 쪽 부담 비율이 적혀 있다.
34.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지침 FG24/6. 2024년 10월 30일 시행이다.
35. 영국 범죄수익법 계좌동결명령 조항과 동의 조항이다.
36. 미국 FinCEN 지침에 적힌 값이다. 통화감독청 회람에는 서면 요청 항목과 금융기관의 재량이 적혀 있다.
37. 호주 재무부 자료. 2023년 신고 건수와 피해액을 근거로 든다.
38. 뉴스핌·법률신문 보도와 법령 자료. 법률 제21320호, 공포 2026년 2월 3일, 시행 2026년 8월 4일이다.



제목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은 정상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11 · NEXUS Research 2026_11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4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은 정상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넥서스 리서치 2026_11, 2026.
수정 이력	2026년 8월 14일 · 법적 의미를 과장하는 표현과 이의제기 준비기간 표현을 바로잡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거래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